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1.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인권위원장, APF 거버넌스 회의 참석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응 요청

4월 27일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APF 거버넌스 위원회는 총 25개국 APF 회원기구 중 호주(의장), 한국(부의장), 카타르, 인도, 말레이시아 5개 인권기구가 주요 결정을 통하여 APF를 선도하는 집행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하반기 APF의 주요활동을 소개한 APF 사무국장 중간보고서와 2021-2022년 APF 연간운영계획을 승인했다. 연간운영계획은 아태지역 회원기구의 승인소위원회 심사 지원방안, 국가인권기구의 역량강화지원 방안과 세계국가인권기구의 연합 내에서 지역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1년 9월 APF 연례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회의는 인도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지난 3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APF측에 서한을 보내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기구연합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APF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최영애 위원장은 회의에서 과거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강조하였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서도 국제사회가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PF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규탄, 미얀마인권위원회의 존립과 직원의 안전에 대한 호소, 미얀마 인권의 적극적 활동 요청을 담은 APF 의장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국가위원회의 요청으로 정식 논의가 시작된 미얀마 사태에 대하여 APF 성명 발표가 결정됨으로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연합의 공식대응을 이끌어냈다.

APF 의장, 미얀마 군부 규탄 성명서 발표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 로잘린드 크로처(호주 인권위원장)는 5월 10일 미얀마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APF 의장은 성명서에서 미얀마 군부에 △정권장악 규탄, △폭력으로 인한 사망·수감 우려, △폭력 중단 및 정치범 사면, △아세안정상회의 폭력중단 합의 이행,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정상화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폭력사태로 인해 765명이 넘는 민간인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고 최소 3,500명이 수감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PF 의장은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얀마 정부의 보복 없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비상사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APF 부의장인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APF 의장에게 송부한 서한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데 대한 결과이다. 이후 위원장은 4월 27일 APF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에서 과거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서도 국제사회가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APF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

출처: 국가인권기구연합, 국가인권위원장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응 요청에 응답 2021년 APF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 결과보고문서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2021년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기념 유엔인권최고대표 성명서

자유롭고 검열 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언론은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언론은 위기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며, 책임규명을 가능하게 하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은 이와 같은 언론의 근본적인 역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히 2021년 5월 3일은 아프리카 언론인들이 합의한 언론 자유의 원칙을 담은 빈트후크 선언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정부 정책이나 공개적 수치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언론인이 기소되는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감염병 기간 중에 허위정보를 제한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법이 언론인 탄압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보장과 차별, 조직적 인종주의, 면책, 부패의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가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이러한 시위를 보도하는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법 집행당국의 불필요하고도 불균형적인 무력의 사용, 자의적인 체포, 형사기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공격, 체포, 형사기소는 다른 언론인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의 논의가 제한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에서 세계가 보다 강력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언론인과 언론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뉴스는 허위정보를 억제하고 현재 사회 문제에 대한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익에 기여합니다. 언론인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손실이 될 것입니다.

정보전달을 위해 헌신하는 언론인의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의 권리가 반드시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045&LangID=E#:~:text=OHCHR%20%7C%20World%20Press%20Freedom%20Day>

3. 유럽평의회 소식

2021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2021년 인권보고서: 민주주의의 후퇴 우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자 페이치노비치 부리치(Marija Pejcinovic Buric)는 유럽 전역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 상황에 관한 최신 연간보고서에서 “명백하고 우려스러운 수준의 민주주의 후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무총장은 “우리가 발견한 많은 문제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각 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합법적인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음이 분명하다. 민주주의 문화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현재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인, 촉진하거나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유럽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유럽평의회 회원국 8억3천만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총장은 강조한다.

사무총장 인권보고서는 유럽인권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유럽평의회 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전역의 최근 상황을 진단한다. 정치제도, 사법독립,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인간 존엄성,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 등의 분야를 살펴본다.

이번 보고서는 파악된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유럽평의회 기구의 기존 제도나 향후 수립될 제도를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다음의 주요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정부 당국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이행을 포함한 유럽평의회 법적 기준의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고 근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따라야 한다.

- 회원국은 유럽평의회가 70년 이상 대표해 온 다자주의를 완전히 포용해야 한다.

-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반드시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례적이면서도 실행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 국가 당국은 민주주의 문화를 포용하고 시민사회영역을 제한하거나 개인, 조직, 비정부기구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민주주의 문화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파악한다.

https://search.coe.int/directorate_of_communications/Pages/result_details.aspx?ObjectId=0900001680a26b2a

4. 인권 NGO 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간

휴먼라이츠워치는 5월 17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례 없는 교육중단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동교육에 미치는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아동 교육의 불평등 심화”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125페이지의 보고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모든 아동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수단, 접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학습에 크게 의존하면서 교육서비스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확인했다. 아동이 동등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자원,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정부도 다수 존재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수백만의 아동들이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지금 이 시점에서 공평하고 강력한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감염병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모든 아동들이 교육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해왔던 교육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감염병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들로 인한 것이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부터 5명 중 1명의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학교폐쇄는 감염병 이전부터 교육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았던 집단의 아동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빈곤계층, 장애아동, 소수민족, 소수인종, 성차별이 존재하는 국가의 여아, 성소수자 아동,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이에 속한다.

교육은 정부의 코로나19 회복 계획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한다. 정부는 감염병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고려할 때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

각 국 정부는 2015년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학교교육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rw.org/news/2021/05/17/pandemic-s-dire-global-impact-education>

5. 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위원회

일 시	회의 명
2021/6/11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
2021/8/24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 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일 시	회의 명
2021/6/2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2021/6/29-7/1	GANHRI 연례회의

▲ UN

일 시	회의 명
2021/5/17-5/21	발전권 실무그룹 제21차 회의
2021/6/21-7/9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
2021/9/13-10/1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
2021/11/1-11/12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